

송 지사, 국가예산확보 전력투구

국회 예결소위 심사 대비, 위원 등 순차적 방문 새만금 등 도정 주요 핵심사업 예산 반영 요청

송하진 지사는 예결소위 심사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14일 국회를 찾아 국회 예결소위원회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면서 국가예산 반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날 예결위 예산소위원회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도정의 주요 핵심사업이 2019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에 게 새만금개발 가속화로 급증하는 투자유치 등에 조속 대응하고 새만금 글로벌 교류중심지의 필수 시설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확보 등 8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조정식 의원을 찾아 2023년 세계잡버리 행사이후에 국제 청소년 메카로 자리잡기 위한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건립비 반영과 장애인유용미생물공학 구축사업 등 8개 사업의 협조를 부탁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예산수석전문위원을 찾아 민간육종연구단지 중심 국내중심 활성화를 통해 2022년까지 종자 수출 2억불 달성을 위한 필수 시설인 종자기업 공동활용공정시설 사업과 새만금 SOC 구축 5개 사업 등 총 8개 사업 반영을 건의했다.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인 이해훈 의원에 게 공격 연금의 안정적인 운영과 국민의 재정부담을 위해 연

금금 운용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용역비 반영과 인계~쌍치 방재터널 국도개량사업 등 8개 사업 반영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에 게 전

국 유일의 사계절 해양레저체험 인프라 구축 및 해양관광 거점도시 육성을 위해 광역해양레저단지 조성 과, 전라유학진흥원 설립 등 8개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피력했다.

국회의원 중 예결소위원회인 정운천 의원을 찾아 사회적경제기업의 핵심거점인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의 차질없는 추진과 전라유학진흥원 설립 등 12개사업에 대한 협조를 부탁

했다.

이어서, 안상수 의원을 찾아 스마트 팜 혁신밸리 조성비 및 사업비 전액 국비 반영 등 8개사업을 건의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앞으로 2019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국회 의결시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정치권, 시군과의 공조활동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탄소제품 둘러보기

제13회 국제탄소페스티벌 개막식이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세계 40개국 250여개 기업이 참여해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와 에릭 피에르장 JEC그룹 회장, 피비앙 페는 프랑스 대사 등 참석자들이 전시관에서 탄소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당정청 "국정원법 정거국회서 처리 노력... 3년 유예 안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정거국회 때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이날 여의도 민주당연구원에서 진행된 비공개 당정청협의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정거국회에서 국정원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의 김민기, 이인영, 전해철, 김병기 등 정보위 소속 의원들과 조국 민정수석, 이석수 국정원 기조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주장한 국정원법 3년 유예 적용과 관련해 "유예를 가정하거나 예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예단하지 않겠다는 것은 야당의 주장을 받지 않고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뜻이

냐는 지적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당정청 모두 국정원법 통과를 위해서 조속히 노력한다는 이야기로 원안대로 유예를 염두에 두거나 그렇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회의 전 기자와 만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을 개혁했다"며 "국내 정치 개입하고 사찰하고 과거의 어두운 전통에서 벗어나 국가 안보를 위해 일하는 기관으로 거듭났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원법은 새로운 국정원 시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 이번 정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이번 정거국회에서 야당과 합의를 해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도내 협동조합 참여 방안 마련을"

도의회 이병철 의원, 새만금추진지원단 행감서 새만금 개발 관련

전북도의회 이병철 의원(전주 5·사진)은 14일 열린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새만금추진지원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만금 개발사업이 대기업의 독점물이 되지 않도록 전북 지역 기업이나 도민이 참여방안과 지역주민이 발전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이나 펀드 투자에 참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자체공급, 건설공사 등에도 향토기업 참여를 명문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자재구매율, 이익공유를 위한 지역주민 참여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몇 %를 참여시키고, 지역구매비율을 몇 %까지 구매요구 할 것인지 도의 계획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요구 협상하라고 촉구했다.

도민의 새만금 개발 체널로서 중앙정부와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에 도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강력한 의지를 충실하게 전달하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한국당 절반은 물갈이해야"

조강특위 '해촉' 전원책 '당, 계파가 있는 일종의 사조직'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갈등을 빚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문자 해촉'을 당한 전원책 변호사(사진)는 14일 당 인적 쇄신과 관련해 "적어도 절반은 물갈이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할 말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러 "원래 당무감사가 49일에 걸쳐서 253개 당협에서 진행될 것으로 논의가 됐다. 그 세부적 계획은 사무총장에게 위임했다. 그런데 이튿날 당무감사위원장이 20일 만에 하기로 했다고 전화를 했다"라며 "253개 당협을 서울에 있는 사무직 80명이 40개 팀 만들어서 불과 21일만에 감사를 하고 평판 조사까지 다 마친다는 게 가능할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 인적 쇄신은 말처럼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변호사는 "한국당은 정파가 있는 정당이다"라며 "계파가 있는 정당, 일종의 사조직"이라고 진단했다.

이러 "정당의 계파는 사조직이라 부를 수 있고 드러내야 할 조직"이라며 "성공하면 이미 타향에서 서고향 인물이라고 출마한다. 거기서 재선하고 삼선을 하는데 이런 조직을 털어내지 않으면 한국당은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처음부터 2월 전당대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해왔다. 당무감사가 끝나면 불과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12월15일까지 인적정신을 하라는 것은 어떤 청산도 하지 말라는 말"이라며 "예산을 의결하는 기간이자 선거제도

를 바꾸는 정개위 활동기간이라든가 두달이라도 전대를 늦춰야 한다고 한 것인데 이러한 제 의견을 월권이라고 한다면 저는 더 이상

등 발언이 월권이라는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당 쇄신을 책임질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정도 말도 못 해서 어떻게 당을 쇄신하겠는가"라며 "전권을 쥔다면 말이 없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강위원과 비대위원 만찬이 하루 전에 고지되자 이를 거절한 일화도 전했다. 그는 "만찬 참석을 몇십 년 보내는데도 고향 돌아가서 고향 인물이라고 출마한다. 거기서 재선하고 삼선을 하는데 이런 조직을 털어내지 않으면 한국당은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미완의 보수재건 활동을 계속할 생각"이라며 "흔히 말하는 보수 캐벌을 막기 위해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보수정당의 재건은 이제 어려워졌단 생각이 저를 여전히 괴롭히고 있다"며 "이 나라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보수가 일어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靑 "장관 인사검증 7대 배제기준 위배된 경우 없다"

청와대는 14일 국회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못하는 이유로 청와대가 제시한 '7대 배제기준'에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일부 야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청와대는 "인사검증 대상자 중 7대 배제기준 대상자 여부"라는 제목의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현 정부 들어서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은 8명"이라며 "위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7대 배제기준'에 위배된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밝힌 8명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

회 위원장, 홍준학 중소기업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이다.

청와대는 "인사검증은 후보자의 직무 능력과 도덕성 등 후보자의 자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직에 대한 적격성을 판단하는 것"이라며 장관 임명 강행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해 11월22일 ▲병역기피 ▲세금탈루 ▲음주운전 ▲성관계 범죄 등 기준에 벗어나는 인사는 고위공직 임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7대 배제 기준'을 발표했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